

민주 “예금자 보호 상향·주 4.5일제 기업 인센티브”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입법 추진 전체 예금자 보호 정책도 입법 무주택자·1주택자 두텁게 보호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주4.5일제 추진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과 부동산 부실자산 대응기금 조성 등 민생 법안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민생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 노동시간 개편안과 관련해 “주69시간제는 폐지하는 게 맞아 보인다”며 “주52시간제를 기준으로 하되 장기적으로 주4.5일제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기업에게 일정한 인센티브를 쥐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도 주4.5일로 점진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주 중 주4.5일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4.5일제 추진, 공짜노동제도 포괄임금제 개선, 휴가사용 보장 강화 및 휴가시간 확대, 취약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 등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실 노동시간 단축 정책을 강력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어설픈 근로시간 개편안 이전에 참담한 우리의 노동 현실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여전히 장시간 노동 국가다. 지난 5년간

매년 500여명의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9대 민생프로젝트’ 관련 입법도 본궤도에 올랐다.

민주당은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와 부동산 부실자산 대응기금 등 금융위기를 대비한 입법에도 나서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예금자 보호를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려 한다”며 “차주, 대출자에 부담하지 않아야 할 여러 명목상 부담금을 제외하는 법안을 통해 예금자, 대출자의 부담을 낮추는 입법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연체 시 전체에 연체 이자를 붙이는 게 과도하다는 평가도 있어 연체된 부분에만 이자를 붙이는 법안도 처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려 한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범위 확대도 추진키로 했

다.

그는 “5000만원까지를 1억원까지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 전체 예금자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도 입법하려 한다”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것에 더해, 미국 사례처럼 일정 요건, 매우 비상 상황이라거나 이런 경우 예금액 전체를 보호해 주는 방안을 포함해 검토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분야 자금흐름 경색 문제에 관한 대응 입법도 예고했다.

그는 “부동산PF발 부도 위험이 커지고, 최근엔 새마을금고 쪽 비상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부동산 부실자산위계 대응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오늘이나 내일 사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관한 대응책도 고려 중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무주택, 1주택자를 보호해야지 다주택자에게 추가로 집을 사라는 정책을 펴면 결과적으로 자산 양극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조정 지역 2주택 문제 등을 포함해 무주택자, 1주택자를 어떻게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꾀하게 할지 등에 대해 부동산 정책을 종합 검토해 조만간 발표하려 한다”고 말했다.

쟁점 법안인 방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등도 신속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의료법, 공영방송정상화법, 화물자동차안전운행법 관련 법 등 직회부를 앞둔 법안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당이 전혀 협조 않는 상황”이라며 “규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곧바로 직회부할 것은 하고, 간호법 등은 이번 본회의 때 상정할 수 있도록 표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尹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 건강 무리”

근로시간 개편 논란 진화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1일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 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에 관해 다소 논란이 있었다”며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에 대해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의 후퇴라는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



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우선 근로시간에 관한 노사 합의 구간을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노사 양측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노동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노동개혁의 또 하나의 과제인 노동시장 유연화는 그 제도의 설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수집할 것”이라며 “특히 MZ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노동 약자와 폭넓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노동시간 개편 여야 충돌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서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안(최대 주 69시간제)을 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붙여 두고 있다. 뉴스

이재명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로”... 개정안 발의

10월25일... “영토 주권 공고화”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독도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 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대응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다. 또 매년 10월25일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 보전·관리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리나라



영토임을 영유권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역사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 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주철현, 불법임대차 농지 부당 혜택 금지 법안 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갑·사진)은 21일 불법으로 임대차한 농지에 대한 농업경영체 등록과 직불금 지급 등 부당한 혜택을 금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과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안은 각각 농지법을 위반, 불법임대차한 농지를 이용해 농업경영체 등록한 경우를 당연 말소 사유로 추가하고, 불법임대차 농지를 직불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주 의원은 “농업경영체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공익직접지불금도 공정하게 지급돼 법을 지키며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민주 “한일정상회담 ‘新을사오적’... 국정조사 추진”

국힘 “후안무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논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을사조약에 버금가는 대일 굴욕외교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정조사 추진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강제동원 선포배상안부터 독도 영유권, 위안부 합의안,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문제를 포함한 한일 정상회담 전반에 대해 날날이 진상을 규명하고 굴욕 외교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의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은 어제 해명하겠다고 ‘독도와 위안부 문제 논의되지 않았고,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대체 국민에게 무엇을 감추려는 것인지 매번 답변할 때마다 내용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독도는 영토 주권의 문제고 위안부 문제는 강제 노동 배상 문제처럼 일본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역사적 해결 과제”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역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된 문제다. 이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은 왜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는지도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반발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며 “한일 위안부 협정도 어렵게 된 것을 민주당 집권 시절에 깬 것도 아니고 깨지 않은 것도 아닌 무책임한 상태를 5년 간 두고 왔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반일 감정만 부추기지 말고 한일 미래에,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숙고해 주기 바란다”며 “자신의 정권 때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는 차원인데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교육위, 31일 ‘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야당 단독 의결... 증인 20명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31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연다.

교육위는 21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 청문회 서류 등 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청문회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실에서 열린다. 증인에는 정순신 변호사, 정 변호사 아들의 변호사, 당시 고등학교 교장, 부교장, 교사, 서

울대 부총장, 서울대 입학본부장,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정 변호사 아들이 전학간 고등학교의 교장, 교감 등 총 20명과 참고인 2명이다. 특히 의혹 핵심 당사자인 정 변호사가 청문회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이날 청문회 관련 안건은 국민의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의결 직전 “여당의 입장이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퇴장하겠다”며 회의장을 나갔다.

서울=김선욱 기자